

姜시장 “주청사 용어 폐기해야...행정 중심은 광주”

**‘동부·무안·광주’ 디지털 청사 구축
20조+α 재정, 화수분 예산으로 전환
공공기관 분산·혁신도시 추가 지정
통합의회 청사, 수용성 고려해 결정
姜 “이달중 늦지않게 예비후보 등록”**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주청사’라는 무용한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를 유지하되 행정의 중심은 광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도시 행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5급3특 전략상 중심성은 확보돼야 한다. 중심도시 광주에는 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주청사 논란에 대해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주청사는 특별법에 담겨 있지 않은 용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강 시장은 “자칫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면 통합의 목적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게 될 것”이라며 “통합의 목적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5급3특의 당당한 1극으로 서기 위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전남 동부권의 역할에 대해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한참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 경제를 책임질 명실상부한 경

제 중심 ‘광역행정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AI 시대에는 디지털 청사 구축이 핵심”이라며 “물리적 거리를 지우고 3개 거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완벽한 연결성을 확보하는 디지털 행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재정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20조+α 예산은 단순한 나누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화수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줬다”며 “조만간 후보 자격으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대해 “이번 주까지는 시장으로서 공식 일정이 잡혀 있다”며 “이달 중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뛰어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당

경선 일정 발표를 보고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추가 배치와 지역별 분산 배치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나주혁신도시는 기존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가 배치하고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맞춤형 분산 배치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제2, 제3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회 특별시이자 일자리 특별시”라며 “특별법 통과와 함께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30개 특례와 권한

이 마련되면서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합의 기회를 잡았듯, 대기업 유치 기회도 꼭 잡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 시장은 “민간 투자를 통한 일자리는 시작하더라도 10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남부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수량과 용수를 고려하면 가능한 지역은 동부권, 정확히는 순천 인근”이라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 강 시장은 “23명의 광주시원과 61명의 전남도위원

을 수용할 회의장과 의원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무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단과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도의회,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논의

의정자문위 올해 첫 회의 개최

균형발전·의회 역할 정립 박차

전남도의의회는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균형발전 및 의회 역할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담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협력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자원 배분

기존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확대되는 정책 권한과 재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 강화 및 전문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4차혁명의 구성으로 주청사와 행정체계에 대한 원칙을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리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검토·반영해 통합 이후 제도 정착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목포시 신항만 인근에서 열린 해양경찰 정비청 준공 및 출범식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경정비청’ 목포시대 막 올랐다

준공·출범식 갖고 본격 가동 시작

전남 수리조선산업 도약 발판 기대

해양경찰정비청이 7년 공사 끝에 4일 목포에서 준공·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목포 시대의 막을 올렸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해경정비청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다졌다.

목포 신항만 허사도에 있는 해경정비청은 5과 정원 166명으로 기존 부산정비청까지 관할하는 본원 역할을 한다.

5천t급 함정을 상가(선박을 수중에서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도장·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할 수 있는 플로팅도크(Floating Dock·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하도록 고안된 바지선 형태의 대형 구조물)와 슬리프트(Ship Lift), 안벽 등 대형 함정 정비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올해 45척의 함정을 시작으로 2028년 이후부터는 100여척의 함정을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해경정비청의 목포 안착을 계기로 수리조선·기자재 업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 지역 수리조선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해경정비청의 외부 발주 사업에 지역의 우수 한 수리조선·기자재 업체가 우선 참여하도록 2

025년 11월 전남도와 해경,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해경정비청과 지속 협의했다.

전남도는 목포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리 전문인력 양성, 장비 대여, 컨설팅 등을 추진해 지역 기업의 수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산업부와 방사청 주도 함정 수리·정비사업(160억원·2026~2030년) 공모에 참여해 지역 수리조선 기업이 함정 수리·정비사업에도 진출하도록 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함정 정비 시 필요한 엔진 등 핵심 기자재 업체를 적극 유치해 해경정비청 출범과 함께 수리조선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경정비청과 전남도가 함께 내딛는 첫 걸음은 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비청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 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 청년 451명 238개 사업장서 일경험 시작

직무 교육 거쳐 최대 5개월

광주시는 4일 “광주청년 451명이 238개 사업장에서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11~13일 시청에서 열린 ‘드림만남의 날’에 참여한 청년 1천900여명 중 45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제19기 드림청년은 오는 7월까지 최대 5개월 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 또는 주 40시간 일경험을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는다.

광주시는 일경험 이후 채용으로 연계될 경우 해당 기업에 연 최대 2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경험 기간 동안 전담 ‘드림 매니저’를 배치해 청년과 사업장 간 소통과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 멘토링 등 부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광주시는 드림청년들이 사업장 일경험 시작에 앞서 직장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 교육을 지난 3~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노인이 있는 곳이 곧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62%가 고령 보행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르신이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배려해주세요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